

지진 등 재해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2017.10.10.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2017.10.16.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2017.10.2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 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로 확대하고,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도 신설하였다.

분양광고시 건축물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 광고 때 건축물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조항(제8조 제1항 제5호의 2)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 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부활 등 재해예방대책 강화

행정안전부가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0월 공포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를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고,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이 적용되는 등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008년 폐지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하여 개발사업의 재해저감 대책에 대한 정량적·공학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20개 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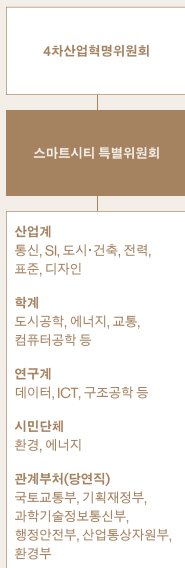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I~VII)으로 표시

정부,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마련에 박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017.10.25.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017.11.16.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 분야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국토교통부(2017),
"4차산업혁명위,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11월 16일자 보도자료.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였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법·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해 쓰이는 소프트웨어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정보시스템이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성과 예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표준 제정과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표준화 대상은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 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 표준 등 3개 표준으로 11월부터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 본격 가동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구현되고, 교통·에너지,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 플랫폼이다.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관련 부처, 유관 전문가, 민간기업과 지속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만큼 스마트시티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6개 유관부처(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신력 있는 대표 기구로 특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기존 성과 고도화·확산을 논의하고, 규제 및 기업애로 발굴·해소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장 고속도로 구간 개방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2017.11.6.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의 고속도로 환경을 11월 7일부터 개방하였다.

케이시티는 고속도로·도심·교외·주차시설 등 실제 환경을 재현하여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테스트베드(test bed)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 시험장 내 32만m² 규모로 구축 중이다.

2018년 말 전체 완공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케이시티의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하여 개방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속도로 구간은 4개 차선과 반대 방향 1개 차선 1km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패스가 가능한 요금소·분기점 및 합류점·중앙분리대·소음방지벽 등 실제 환경을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요금소의 좁은 길 통과, 요금소 전후의 차선 감소·증가, 분기·합류점에서의 끼어들기, 소음방지벽·중앙분리대로 인한 통신·신호 장애 발생 등 다양한 상황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케이시티의 개방 구간은 사전 예약을 하면 기업 대학 연구소나 개인 법인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리자는 “이번 고속도로 환경 우선 개방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개발이 보다 빨리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케이시티 전체가 2018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개방되는 케이시티의 고속도로 환경

자료: 국토교통부(2017),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11월 6일자 보도자료.

*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가능(돌발상황 시 운전자 개입)

전기자전거의 안전 요건 확보 의무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2017.10.10.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완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 3월 시행하게 된다. 이에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안전확인신고*가 되어야 한다. 제시된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하며,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더불어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한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노상주차장(지자체 설치)		총면적의 5% (33.3대)	주차대수의 40% (33.3대)
노외주차장	지자체 설치	총면적의 5% (33.3대)	→ 주차대수의 40% (33.3대)
	민간 설치	총면적의 5% (33.3대)	주차대수의 20% (16.6대)
부설주차장 (민간 설치)	주택, 문화, 집회시설 등	주차대수의 20%(16.6대)	
	공장, 발전시설 등	주차대수의 10%(8.3대)	

자료: 행정안전부(2017),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10월 10일자 보도자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이륜자전거(전기자전거) 안전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신고한 제품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기준 강화 및 적용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2017.11.14.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의 의무 대상과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중화장실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고 공중화장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이 적용되는 바닥면적을 시설별로 1,000m²씩 하향하여 남녀 분리 설치 의무를 확대하였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남녀화장실 분리 기준이 없었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바닥면적 2,000m² 이상이면 분리 설치 의무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등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확대하였다.

다만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사항은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게 된다. 개정 사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 대상	업무시설	3,000m ² 이상	2,000m ² 이상	대상 확대
	업무시설+근린시설	2,000m ² 이상	2,000m ² 이상	현행 유지
	근린시설	미적용	2,000m ² 이상	대상 확대
	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수련시설 *	2,000m ² 이상	1,000m ² 이상	대상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 대상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대상 확대

자료: 행정안전부(2017),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11월 14일자 보도자료.

* 예식장, 전시장, 동·식물원, 병원,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복지시설 등

방치된 도시기반시설, 지역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2017.10.30.

경상남도 서부대개발과
2017.10.26.

서울시, 방치된 군사시설에 문화시설 조성

서울시가 도봉구에 위치한 대전차방호시설을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창작공간 ‘평화문화진지’로 리모델링하여 지난 10월 개관하였다.

대전차방호시설은 1969년 유사시 건물을 폭파해 적군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사시설이다. 군사시설인 1층 위로 1970년 위장 목적으로 세워졌던 시민아파트 2~4층은 건물 노후화로 2004년에 철거되고, 군사시설 1층 부분만 존치한 채 12년 넘게 방치되어 왔다.

리모델링된 평화문화진지는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실내에는 입주작가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工房, 전시공간,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다목적전시실, 협업을 추진하는 커뮤니티 등 시민 편의공간과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이 조성되었다. 실외에는 축제·공연 등이 가능한 야외행사공간, 주민 휴게공간이 꾸며졌다.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20m 높이의 전망대는 유사시에는 감시용 군사시설로, 평상시에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여 주변의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폐조선소 부지에 해양관광 거점시설 조성 추진

경상남도과 통영시·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영의 폐조선소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해양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조선소 부지 14만 5,010㎡에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랜드마크 건축물, 아쿠아리움 등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앵커시설을 갖추고 쇼핑물·숙박시설 등도 유치할 예정이다. 통영케이블카와 통영국제음악당, 박경리와 윤이상역의 자취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남해안의 관광거점으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공모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평화문화진지 조감도

자료: 서울시(2017), "대전차방호시설이 문화공간으로 재생, 「평화문화진지」로 문을 연다", 10월 30일자 보도자료.

녹색도시·생태도시를 목표로 관련 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2017.10.12.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2017.10.22.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2017.10.26.

광주시, '203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광주시가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3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10월 진행하였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해 장기적인 계획,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공원 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게 된다.

기본계획(안)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의 미래상' 실현을 목표로 ▲푸른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 만들기 ▲건강도시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원복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원녹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원녹지를 4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충청남도가 앞으로 10년간 1,000억여 원을 들여 중요 야생생물 서식지를 복원한다. 구도심 자투리 땅에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생태·경관 보전 지역도 지정·운영한다.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은 향후 10년 동안의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수단 마련 필요성에 따라 세운 것으로, 10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실천계획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 고향 충남'을 비전으로 ▲자연환경 데이터베이스(DB) 지속적 유지·관리 ▲중요 야생동물 지속 관리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태 공간 조성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부산시, '2030 낙동강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부산시가 하천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낙동강생태공원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2030 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9년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바 있으나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롭게 수립되는 마스터플랜에는 5개 생태공원(화명, 대저, 삼락, 맥도, 을숙도)마다 차별화된 조성전략을 수립하여 공원별 테마를 부여하는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보행육로 등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생태자원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수단을 이용한 탐방코스의 도입도 추진된다. 시민들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공원 내 체육시설을 재배치하고, 야구장과 파크골프장도 추가 설치된다. 아울러 생태공원 내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를 위하여 모바일과 연계한 GPS 위치입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